

민평 개원 차질 1년 6개월…원형복원 빨리 매듭 지어야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전당 정상화 시급한 현안

5·18 최후 항전지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민평)인 옛 전남도청에 대한 복원문제가 문화전당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화전당장의 장기공백에다 전당 개관 이후 1년 6개월 동안 민평이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문화전당측과 원형 복원을 주장하는 5월 단체들간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 상생의 결론을 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새정부에서 ‘문화전당 활성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문화전당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평 논란 서둘러 종결해야=민평은 현재 광주항쟁 관련 흔적 원형복원 논란으로 전시 콘텐츠 구축이 중단돼 있다. 민평은 옛 전남도청·전남지방경찰청 본관 등 5월 유적을 포함한 6개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공간에서는 5월을 예술로 승화한 ‘열흘간의 나비떼’가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민평은 옛 전남도청 본관에 있던 5월 항쟁 흔적을 복원해야 한다는 5·18 기념재단 등 5월 단체의 반발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5·18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현재 252번째 현장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민평은 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유일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민평의 전시 콘텐츠는 1관(옛 경찰청본관)만 완료된 상태. 2관(경찰청민원실), 4관(도청본관)은 콘텐츠 구축이 중단됐고 3관(도청 회의실), 5관(상무관)은 건축 리모델링만 완료됐다. 현재 5·18 37주기를 계기로 임시 개방돼 있는 상태다.

대책위는 도청 본관과 도청 민원실의 경우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방송실·회의공간과 식사공간, 무기고, 시민군 퇴로로 쓰인 만큼 본관과 민원실 모두 원형을 살리고 2층 연결 통로까지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지난 2008년 원형 복원논란이 제기돼 2011년 부분 보존으로 일단락된 도청 별관의 원형복원 문제도 포함돼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 시대’ 1면에서 계속

광주시와 문화단체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헌법적인 특별법의 시한 연장을 바라고 있다. 오는 2026년 시효 만료되는 특별법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목표 기간도 2023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출대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문화전당 운영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

시도민대책위 “5·18 흔적 복원”

전당측 “예산 100억여원 소요”

공석 장기화 전당장 선임도 서둘러야

문화전당측은 대책위의 주장을 수용하면 복원기간에만 1년, 예산은 100억여원 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다 문화전당의 정상운영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은 이제 전향적으로 광주의 미래를 위해 양측이 상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의 한 문화전문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문화전당이 모처럼 호기를 맞고 있는 데 광주 내부의 논란으로 문화수도 조성사업 활성화와 문화전당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장기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광주의 미래를 공통분모로 놓고 문화전당 원형복원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당장 장기 공석=문화전당이 지난 2015년 11월 개관했음에도 전당장은 현재까지 공석이다. 문화부는 그동안 3차례나 공모를 실시해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시켰다. 4차 공모가 마감됐지만 전당장 선임 시기는 미정이다. 지휘부 공백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문화전당 조직은 활력을 잃은 상태다.

지역에서는 “전당장이 장기 공석임에도 문화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전당장은 전당 활성화 뿐 아니라 미래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이다. 전당장이 처리해야할 과제로 적잖다. 현재 문화전당은 정부 조직(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이원적 운영체제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업무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장기적으로는 문화전당의 운영주체에 대한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문화전당의 운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0년 4월이면 아시아문화원이 맡게 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5·18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옛 전남도청) 앞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文 측근 줄줄이 2선 후퇴…탕평인사 가속도

이호철 출국 이어 양정철·최재성 “정권창출로 내 할일 다했다”

정권 교체의 주역이었던 친문(親文·친 문재인) 측근들이 잇따라 2선으로 후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탕평인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지난 15일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분(문 대통령)과의 눈물나는 지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고 전 이제 퇴장한다”고 밝혔다. 양 전 비서관은 현 정부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조만간 뉴질랜드로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호위부사’로도 불렸던 최재성 전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재가 넘치니 원래 있던 한 명쯤은 빈손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제 마음을 드렸다”며 “이런저런 하마평에 답하는 글이 됐으면 해서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당일에 해외로 출국했다. 그는 지인에게 남긴 글을 통해 “마침내 정권교체가 되고 제가 존경하는 노변(노무현 전 대통령), 문변(문재인 대통령) 두 분

이 대통령이 됐다. 살아오면서 이만한 명예가 어디 있겠나. 영광이다”며 “마침내 저도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위해 먼길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측근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2선 후퇴를 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운신의 폭을 넓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 여권의 진용에 ‘탕평’과 ‘통합’의 색채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관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경선 때부터 끊임없이 패권주의 논란을 야기해온 ‘친문 프레임’을 넘어설 수 있게 됨으로써 인사뿐만 아니라 정책과 대(對)국회 관계 등 국정운영 전반에 자신감을 갖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계파와 지역을 뛰어넘는 통합형 인사를 선보였다. 취임 첫날 호남 출신의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친문 측근이 아닌 임종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균형인사의 시작”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조각인선 과정에서도 당평과 통합이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대변인에 ‘안희정의 입’ 박수현 前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에 박수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밤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와 16일 오전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번 대선 때 안희정 캠프 대변인으로 활약하다가 문 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뒤로는 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해 공보단 대변인을 지냈다.

청와대의 ‘열광’이자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에 문 대통령과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한 안희정 충남지사 측 인물들을 기용한 것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대통령직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는 당내 단합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도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평소 차분하고 예의 있는 태도로 여러 의원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정치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박 신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임명 발표 직후 “건조한 소통에만 의지하지 않고 따뜻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와대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여야 모든 정당 대변인의 발표를 국민의 말씀이라 여기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